

보 도 설 명 자 료

('19. 12. 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법·정당한 절차를 통해 추진중
입니다. 또한, 기사에서 제기한 영국·체코·UAE 등의
원전 수출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닙니다.

(조선일보 12.2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에너지전환 정책은 적법·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
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음
- ◇ 신한울 #3·4 건설계획 취소는 세계적 추세, 전력수급 상황 등을
고려하여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이며, 월성 #1 조기폐쇄는
한수원 이사회가 경제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결정한 것임
- ◇ 기사는 개인의 단편적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·체코·UAE 등의
원전 수출 관련 다수의 의혹을 제기하였으나, 이는 아래 사실관계
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실이 아님
- ◇ 12.2일 조선일보 <(前 두산중공업 부사장 인터뷰)“탈원전 뒤로 직원
사표를 매일 다섯명꼴로 받았다. 내가 罪人 같았다.”> 기사에
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현 정권의 탈원전 시나리오는 공적 라인에서 나온 것이 아님
- ② 정부는 책임질 공문은 보내지 않으며, 신한울 원전 백지화를
한수원 자체 결정으로 떠밀고 있음
- ③ 정부는 멀쩡한 월성 #1호기를 그만 돌리라고 했음

- ④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 정부와 한전의 사전 교감 부족*, 정부의
압력 등으로 영국 수주에 실패했음

- * 조환익 전 한전사장과 정부간 사전교감이 부족하였고, 이것이 수주 및 한전
사장 사임에 영향을 끼쳤음
- * 영국의 담당 장관이 방한하는 등 수익보장에 대해 적극적이었지만, 정부의
압력으로 수주가 어려워 졌음

- ⑤ 체코 원전은 원전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고, 후속
조치도 없었음

- ⑥ 당초 UAE 바라카 원전의 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되어
있었으나, 탈원전 등으로 UAE 신뢰를 잃어, 3개국 회사에 5년간
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음

- ⑦ 두산중 원전 부문 공장 가동률 하락 및 협력사 어려움 등이 전망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에너지전환 정책은 여러 단계의 적법·정당한 의사결정 과정을
거쳐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임
 -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, 월성#1 조기폐쇄, 신고리 #5·6 공사
중단 등은 대통령 공약('17.4)에서부터 반영되어 있던 사안이며,
 -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국정과제('17.7) 확정, 에너지
전환 로드맵 국무회의 의결('17.10)에 따라 정부 정책으로 확정됨
- ② 신한울 #3·4 건설계획 백지화는 세계적 추세, 전력수급 상황 등을
고려하여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사안임
 - 에너지전환은 세계적 추세로, 적극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,
원전의 추가 확대는 시대 흐름에 맞지 않음

- * OECD 36개국 중 원전이 없거나 원전을 감축하는 국가가 26개국(72%)
- * '18년 전세계 발전설비 투자(4,780억달러) 중 재생에너지가 64%, 원전은 10%

- 또한, 現 정부에서도 3기의 원전이 준공될 예정이며, 제8차 수급 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#3·4 제외시에도 '30년 전력 예비율은 충분(22%)
- * 원전 준공 전망 : 신고리4('19), 신한울1('20), 신한울2('21), 신고리5('23), 신고리6('24)
- 이러한 상황에서 신한울 #3·4 건설은 과도한 전력 예비율을 초래함

-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에 대한 정부 방침 및 이에 대한 비용보전 방침을 한수원에 공문('18.2, '18.6)으로 발송하였음

③ 월성 #1 조기폐쇄는 한수원 이사회가 외부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결과(18.4~6)를 바탕으로 경제성·안전성·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임

- 한수원에 따르면, 월성 #1은 최근 10년간 가동할수록 적자(원가>판매단가)가 누적되어 온 원전이었음
- * 최근 10년간('08~'17년, '13~'14년 제외) 연평균 적자규모는 1,036억원

④ 영국 원전사업에 대해 “정부와 한전의 사전 교감 부족, 정부의 압력 등으로 영국 수주에 실패했다”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
- 한전의 우선 협상자 선정 이전('17.12.6)부터 한·영 정부 및 기업간 협의가 시작되었으며, 정부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사전교감이 있었음
- '17.9.7일 한·영 원자력산업대화체 개최시(서울) 산업부, 한전, 한수원 등은 영국 기업에너지부와 신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,
-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('17.12.6) 이전인 '17.11.27일에 산업부장관이 영국을 방문하여 한·영 원전협력각서를 체결하였으며, 당시 한전, 한수원 사장도 동행하여 영국과 원전사업을 논의함

- ☞ 따라서 한전이 정부와의 사전 교감없이 독자적으로 영국 진출을 추진했고, 이로 인해 정부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
- 한전이 '신중하게 협상하라'는 정부의 압력으로 수주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

- 산업부 장관, 한전 사장의 영국 방문시('17.11.27.)시 英 기업에너지부가 전력구매가격 보장 관련 협의를 제안한 것은 맞으나,
- 이후 영국정부가 새로운 원전사업 모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으나('18.6), 영국 정부의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어 한전이 뉴젠 인수에 이르지 못한 것임

- ☞ 따라서 한전의 뉴젠 인수 포기는 협상 당시 상황에 따른 사업적인 결정이지 정부의 압력에 따른 결정이 아님

- 참고로 조환익 전 한전 사장은 뉴젠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 이후에 건강상 이유로 자진 사임하였으며, 본인이 수차례 언론을 통해 이를 밝힌 바 있음

* '17.12.8일자 중앙일보, 12.7일자 한겨레신문, 한국일보 등 다수 보도

⑤ 체코는 “원전세일즈를 이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었고, 그 방문 뒤로 체코와 원전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”는 주장도 사실과 다름

- 체코는 '15년 이래 원전도입계획을 밝혀왔고, 우리원전 기업이 적극 수주 추진 중인 국가인 바, 원전 세일즈로 방문할 나라는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- 특히 체코의 원전도입 계획이 구체화*됨에 따라 한수원, 두중 등 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주 활동**을 적극 실시해왔음

* 체코의 국가에너지계획('15.5월) 발표 이후에 여러 원전수출국이 적극적 관심표명
- 특히 '19~'20년 중 신규원전 사업·투자모델 결정하고, 20년 중 사업자 선정 절차 착수 예정으로, 한수원은 체코원전사업 RFI(기술정보요구서) 답변서를 제출('16.10월)

** 한수원, 두중 등은 한국원전 홍보 및 양국 기업간 협력 구축을 위해 한-체 원전 포럼('17.4월, '19.11월), B2B 미팅('17.4월), 한국원전의 밤('17.11월) 등 행사 개최

- 두중도 대우건설과 컨소시엄으로 한수원의 체코사업 시공사로 선정('18.8월)되었으며, 한전기술·한전연료·KPS와 함께 체코원전사업 협력 협약을 한수원과 체결('18.9월)하는 등 적극적인 수주활동 중
 - ☞ 우리 원전기업이 적극 수주 추진 중인 체코의 방문 필요성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
 - '18.11월 대통령 체코 방문시, 체코내 주요 현안 결정권을 가진 마비쉬 총리와 면담하였으며,
 - 이를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양국간 원전협력 방안 등을 정상차원에서 논의한 바 있음
 - 이후 우리 정부와 기업은 체코 원전사업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, 정상외교를 기반으로 수주여건을 적극 조성 중인 바, 원전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
 - 특히 '18.12월 두산중공업, 대우건설, 한수원 등이 체코현지기업과 MOU를 체결하였으며,
 - * ('18.12) 한수원-대우·두산중-Metrostav(현지 건설사) MOU 체결('18.12)
 - (‘19.06) 대우·두산중 파견자 근무시작(현지 KPMG와 시공성평가 용역 수행)
 - 체코 정부 대상 기술설명회 개최('19.1), 체코 하원 경제위원회 주최 에너지포럼 참석('19.2) 등도 실시한 바 있음
 - ☞ 체코 원전수주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체코 원전 관련 후속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름
- ⑥ “UAE 바라카 원전의 서비스 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되어 있었으나, 탈원전 등으로 UAE 신뢰를 잃어, 3개국 회사에 5년간 나눠주는 식으로 바뀌었다”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
- 정비사업계약(LTMSA)은 한수원, 두중 등 한국기업 중심으로 체결된 바, 3개국 회사에 5년간 배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* LTMSA: Long-Term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

- 현재까지 UAE측은 한수원/KPS, 두중과 각각 정비사업계약을 체결·실시중에 있으며, 다른 국가와 계약은 체결되지 않음
- ☞ 3개국에 정비사업을 나눠주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
- 또한 한전에 따르면, 바라카 원전 주계약서에 한국기업이 서비스 사업을 담당한다는 명시적 내용이 없는 바, 서비스사업을 우리가 맡기로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
 - 바라카원전운영사는 자신들의 정비사업자 선정의 의사결정 과정은 한국정부의 원전정책과 무관함을 공식적으로 밝혔음
 - 참고로 LTMSA 계약은 연장이 가능하므로, 우리 기업과 정부는 성실한 계약이행과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예정
- ☞ 우리가 “서비스사업을 전부 맡기로 했고”, 해당 사업이 “탈원전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다”는 것은 사실과 다름
- 한-UAE간 관계가 이번 정부에서 ‘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’로 격상된 바, 우리가 UAE 신뢰를 잃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 - '18.3월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시 양국관계를 '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'로 격상시켰으며,
 - 장기설계지원계약·핵연료협력MOU('18.3), 정비사업계약('19.6)을 체결하는 등 원전 전주기 협력을 구축하였음
 - 또한 한전-바라카사업법인(BOC)간 '제3국 원전시장 공동진출 협력 MOU'('19.9), 과기부-UAE에너지산업부간 '포괄적 원자력 R&D협력 MOU'('19.11) 체결 등 지속적으로 원전협력을 강화한 바 있음
- ☞ 이같은 한·UAE간 관계를 감안시, 한국이 UAE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

㉓ 정부는 업제 어려움에 지속 귀 기울이며, 보완대책('18.6)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필요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나가겠음

○ 단기적으로는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안전투자 확대, 수출 활성화, 선발주 등을 통해 일감을 제공하고, 금융·인증비용 지원도 추진

* '30년까지 1.7조원 설비보강, UAE 등과 협력을 통한 제3국 공동진출, 협력사 대출금리 감면(최대 3.3%p), 인증 취득·유지 비용 지원 등

○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해체, 방폐물 관리, 방사선, 핵융합 등 대체·유망시장을 신규 창출하고, 사업전환 등을 지원 예정

* 해체산업 육성전략('19.4), Nu-Tech2030 수립('19.9), 원자력미래비전 제시('19.12)

※ 문의 : 원전산업정책과 서기웅 과장(044-203-5320) / 유의택 사무관(5325)
원전수출진흥과 김진 과장(5330) / 임태섭 사무관(5332)
전력산업과 윤요한 과장(5150) / 김동환 서기관(5153)